

한국 문헌정보학은 건강한가? *

What is Wrong with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이 제 환(Jae-Whoan Lee)**

<목 차>

- | | |
|----------------------|-----------------------|
| I. 글을 시작하며 | III. 한국 문헌정보학의 건강 되찾기 |
| II. 한국 문헌정보학의 구조적 질환 | 1. 학문의 정체성 확립 |
| 1. 학문의 정체성 혼란 | 2. 연구의 유용성 제고 |
| 2. 연구의 유용성 미흡 | 3. 교육의 실효성 강화 |
| 3. 교육의 실효성 부족 | IV. 글을 마치며 |

초 록

이 글의 목적은 공식적으로 출범한지 60년이 넘는 '한국 문헌정보학'의 건강을 위협하는 구조적인 문제들을 점검하고 필수 학문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기 위한 해법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 글에서는 특히, 대학의 구조조정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위기의 국면'에서 문헌정보학의 기본 체질을 강화하기 위해서 학계가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주요 문제들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학문의 정체성', '연구의 유용성', '교육의 실효성'의 측면에서 한국 문헌정보학에 내재하는 문제들을 구체화하면서 그러한 문제들을 만성적 질환으로 만들어온 요인을 밝혀내고 있다. 그 과정에서 논의의 초점을 한국 문헌정보학이 처해있는 고유하고 토착적인 환경을 분석하는데 두고 있으며, 문제의 해결을 위한 처방의 모색에 있어서도 한국의 실정에 적합한 실사구시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키워드: 문헌정보학, 문헌정보학과, 문헌정보학교육, 문헌정보학연구, 정체성, 교육과정, 교과과정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figure out the structural problems which have threaten both scholarship and profession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in South Korea. In details, this study discusses such major weakness in Korean LIS as vague academic identity, poor research activities, and unreasonable educational systems. The emphasis for discussion is on identifying the unique and indigenous variables which have had deep influences on both development process and current crisis of Korean LIS. Finally suggested are the strategies and methods for promoting the good health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as an independent academic discipline as well as a prospective profession.

Keywords: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Academic identity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ducation in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in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 이 연구는 2017년도 부산대학교 기본연구지원사업(2년)에 의해 연구되었음.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jwleeh@pusan.ac.kr)

•논문접수: 2018년 8월 8일 •최초심사: 2018년 8월 27일 •게재확정: 2018년 9월 5일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9(3), 1-32, 2018. [http://dx.doi.org/10.16981/kliss.49.201809.1]

I. 글을 시작하며

대학가에 구조조정의 바람이 불 때마다 문헌정보학과 교수들의 가슴에는 불안감이 밀려온다. 구조조정의 칼날을 버티어 낼만큼 문헌정보학과의 조직적 위상과 역량이 견고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내 입지가 허약한 문헌정보학과일수록 소속 교수들은 스스로 몸을 낮추고 활로를 찾느라 분주해 진다. 그들은 자의반타의반으로 학과의 정원을 줄이기도 하고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는 다른 학과들과 통합을 모색하기도 한다. 1990년대 후반에 ‘학부제 바람’이 몰아쳤을 때도 그러하였고, 2010년대 중반부터 위협적으로 밀려오고 있는 ‘구조조정의 쓰나미’ 앞에서도 유사한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이고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1957년에 4년제 대학의 학과로 공식 출범하였으니 한국 문헌정보학은 무려 60년이 넘는 학문적 뿌리를 갖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어찌하여 구조조정의 바람이 불 때마다 많은 문헌정보학과들은 맥없이 움츠러들면서 존폐를 걱정해야 하는 빈궁한 처지가 되었을까?

안타까웠다. 무엇보다도 학자로서의 자존심이 짓밟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문헌정보학이 허약한 체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웠다. 게다가 이번 ‘구조조정’의 여파가 과거처럼 개별 학과의 입지 축소와 위상 약화에 그치지 않을 것임을 익히 알기에 안타까움에 더해서 걱정이 밀려 왔다. 이번 구조조정의 뿌리는 한국사회가 스스로 만들어온 ‘인구절벽’이라는 암적 질환에 있기 때문이다. 인구절벽으로 인한 학령인구의 급감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1980~90년대에 무분별하게 신설되거나 증원되었던 많은 학과들이 ‘존폐의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구조조정으로 인한 학과의 축소나 폐지는 ‘불가역적’일 것이며, 궁극적으로 관련 학자의 감축과 관련 학문의 위축으로 귀결될 것은 자명하다. 문헌정보학 또한 예외가 아니어서 개별 학과의 입지와 위상 문제를 넘어서 학문의 뿌리가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다.

사태의 진전이 이렇듯 엄중한데도 불구하고 한국 문헌정보학계에서는 이러한 사태에 조직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어떠한 노력도 감지되지 않는다. 현재의 위기에서 살아남으려면, 비록 원천적인 대응에는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문헌정보학의 학문적 가치와 실천적 경쟁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범 학계의 노력이 더욱 절실한 시점이 아니던가? 그런데 학계 차원의 조직적인 노력은커녕 개인적인 혹은 학과나 동문 단위의 소아적인 이익을 탐닉하는 분과적이고 분열적인 모습이 한국 문헌정보학계에는 여전히 만연해 있다. 이런 상황을 우려스럽게 지켜보면서 더 이상의 침묵은 중견학자로서 뿐만 아니라 후학을 양성해온 교육자로서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란 생각이 밀려왔다. 자칫 방관하다가는 지난 25년 동안 필자 나름대로 방어하고 키워왔던 한국 문헌정보학자로서의 자긍심마저 송두리째 망실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몰려왔다. 이 글은 그러한 위기감에서 출발하였다.

“한국 문헌정보학은 건강한가?” 이 글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하고자 하는 주제이자 화두이

다. ‘학문의 위축과 쇠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필자가 이렇듯 원론적인 화두를 집어 든 까닭은 자명하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한국 문헌정보학의 위기는 근본적으로 학문의 허약한 체질에서 비롯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한국 문헌정보학의 건강 상태를 냉철하게 점검해 보는 작업은 현재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방법은 물론이고 학문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해법의 모색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에 이 글을 통해 필자는 한국 문헌정보학에 내재해온 구조적인 질환을 철저하게 밝혀내는데 무엇보다도 주력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고심했던 선학들의 연구와 관련 데이터를 참조하면서 ‘학문의 정체성’, ‘연구의 유용성’, 그리고 ‘교육의 실효성’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며, 그 과정에서 한국 문헌정보학의 고질적인 병증을 드러내고 그러한 병증을 치유하기 위한 실효적인 처방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한국 문헌정보학의 구조적 질환

1998년에 필자는 한국 문헌정보학의 건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당시 문헌정보학이 안고 있던 세 가지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첫째는 학명의 개정(도서관학에서 문헌정보학으로) 이후 ‘학문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정립하는데 실패하다보니 사회 전반에 걸쳐 학문에 대한 인지도와 이해도가 매우 낮은 상태에 있다는 점이었다. 그 결과, 역사와 규모에 비해 학문의 가치가 과소평가되면서 교육학술정책으로부터의 소외와 교육수요자로부터의 외면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둘째는 연구 집단의 규모가 영세하고 연구의 양적 성과가 미흡한 상태에서 연구의 과학성과 토착성이 취약하다보니 ‘연구의 유용성’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는 점이었다. 그 결과, 학계나 대학에서 독자적인 학문 영역으로서 위상을 확립하는데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마지막으로, 학문의 실천 현장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을 무분별하게 증설하다보니 ‘학문의 실천성’이 나날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이었다. 그 결과, 우수한 인력의 유입과 공급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면서 학계와 현장이 질적으로 침체하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이러한 지적과 함께 필자는 ‘한국 문헌정보학의 생존을 위한 처방’을 세 가지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첫 번째 처방은 새로운 학문의 명칭에 걸맞은 정체성을 명확히 확립하여 미약한 인지도와 열악한 이미지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무엇보다도 기존의 기관(도서관) 중심적 학문에서 탈피하여 ‘지식과 정보의 유통 현상’을 연구대상으로 삼되 학계의 인적 역량을 고려하여 학문의 성격과 연구 영역을 합리적으로 정립할 것을 촉구하였다. 두 번째 처방은 연구의 유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학문의 응용적 성격에 어울리는 현장 중심의 연구를 활성화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특히 기존의 서구 추수적인 연구를 지양하고 한국의 실정에 적합한 토착적인 연구에 주력할 것을 촉구하였다. 더불어 연구 역량의 근본적인 강화를 위해 학계와 현장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현장 인력의 연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환경의 조성 과 제도의 구비가 시급함을 주장하였다. 세 번째 처방은 학문의 실천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정비하고 교과과정을 합리적으로 개편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무엇보다도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교육과정을 통일하고 교과과정을 시대적 변화와 현장의 요구에 맞게 표준화할 것을 촉구하였다(이제환 1998).

이와 같은 내용의 처방을 제시하면서 필자는 학계와 현장이 함께 모여 학문의 건강성을 제고하기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필자의 제안은 학계는 물론이고 현장의 관심과 공감을 이끌어내는데 실패하였다. 오히려 소장학자의 치기와 격함을 힐난하는 목소리를 여기저기서 들어야 했고, 그로 인해 한 때 자중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였다. 그러나 필자는 그 후에도 필자가 제안했던 ‘학문의 건강성 제고를 위한 처방’을 실천에 옮기고자 나름대로 노력하였다. 특히, 학회나 협회를 위해 봉사할 기회가 주어질 때면 “문헌정보학 연구와 교육의 건강성 제고”를 주제로 하는 학술대회나 워크숍을 개최하여 학계와 현장의 관심과 노력을 이끌어내고자 시도하였다.¹⁾ 더불어 학술논문을 통해 문헌정보학 연구와 교육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부각시키면서 근본적인 혁신을 촉구하기도 하였다.²⁾ 그러나 그러한 필자의 노력과 시도가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던 것 같다. 이 글의 도입부에서 언급하였듯이, 2018년 현재 한국 문헌정보학의 건강 상태가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필자가 20년 전에 지적하였던 한국 문헌정보학의 구조적 질환은 2018년 현재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을까? 20년 전과 동일한 문제의식을 갖고 필자는 지금부터 한국 문헌정보학의 건강 상태에 대한 점검에 나서고자 한다.

1. 학문의 정체성 혼란

1991년에 한국도서관학회가 한국문헌정보학회로 개명하였으니 문헌정보학이라는 학명이 한국 사회에 공식적으로 등장한지도 27년이 되었다. 그리고 필자가 새로운 학명에서 비롯되

1) 가령, 한국도서관·정보학회가 개최했던 2010년 동계학술발표대회의 기획주제는 “문헌정보학 교육, 이대로 좋은가?”이었으며, 2011년 하계학술발표대회의 기획주제는 “문헌정보학 연구, 이대로 좋은가?”이었다. 이러한 학술대회에는 학계와 현장 사람들이 대거 참여하여 기획주제에 대한 활발한 토론을 벌였으며, 토론의 결과물들은 학회지를 통해 유통되었다.

2) 필자가 그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발표했던 학술논문은 다음과 같다: 전문직 이론을 통해 본 사서직의 전문성.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7(2): 57-87; 문헌정보학 교육에 대한 현장 사서의 평가와 요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9(4): 45-69; 한국 문헌정보학에서 참고봉사와 정보봉사의 의미.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8(4): 299-323; 한국 도서관정보정책의 추이와 과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9(4): 5-32; 한국 도서관계에서 독자상담과 독서치료의 의미.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0(4): 5-29; 한국 도서관계의 이용자교육: 현황과 과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2(1): 3-27; 한국 대학도서관정책의 추이와 과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3(4): 317-346; 대학도서관 전자자료 업무의 현안과 해법.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4(4): 145-175; 대학도서관 장서문제의 본질과 해법.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5(4): 277-308; 대학도서관 목록문제의 본질과 해법.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6(4): 45-78; 한국 공공도서관정책의 추이와 과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7(1): 21-46; 학교도서관정책의 추이와 과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7(3): 41-70.

는 학문적 정체성의 혼란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문제를 제기했던 때로부터도 20년이 흘렀다. 그렇다면 2018년 현재, 한국사회는 문헌정보학이라는 학문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특히 문헌정보학의 목적과 성격 그리고 핵심 내용에 대해 한국사회의 구성원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 문헌정보학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보편적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필자는 먼저 인터넷 백과사전부터 검색하였다. 다음 인용문은 위키피디아의 한글판인 <위키백과>에서 검색한 내용이다.

“문헌정보학은 인류가 발전시켜온 모든 학문의 산물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기 위한 사회과학이다... 대한민국의 경우, 전통적인 도서관학과 1960년대 이후 발달한 정보학, 도서의 고증과 해석을 중심으로 하는 서지학, 기록물의 관리와 보존에 대한 기록관리학이 합친 학문이다. 정보의 발생부터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이용까지 정보에 관련된 이론과 원리, 방법과 기술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다.”

일견 그럴듯해 보인다. 물론 학문의 목적에 대한 설명에서부터 오류가 있지만, 문헌정보학자인 필자의 입장에서 볼 때 평소 접하던 문구들의 ‘조합’이다보니 낯설지 않다. 그러나 찬찬히 읽어보면, 명색이 백과사전의 설명인데 지나치게 무성의해 보인다. 특히, ‘문헌정보학=도서관학+정보학+서지학+기록관리학’이라는 설명은 문헌정보학의 정체성을 가늠하는데 도움을 주기는커녕 혼란을 가중시킨다. 뿐만 아니다. 학문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정보’를 키워드로 사용하고 있지만 정보의 의미에 대한 간략한 설명조차 없다. 위의 내용을 통해 일반인들이 문헌정보학의 성격과 내용을 이해한다는 것이 결코 수월해 보이지 않는다.

이번에는 <위키백과>에 비해 좀 더 전문적으로 보이는 또 다른 백과사전을 찾아보았다. 다음 인용문은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발간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서 검색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문헌정보학은 문헌을 수집·조직·축적·제공하는 도서관의 제 현상을 인식하고, 그 원칙·이론·기술 등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다. 문헌은 형태와 종류에 상관없이 정보매체에 기록된 정보의 총칭이다... 문헌과 관련된 모든 사실이나 현상을 논리적,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이의 사회적 적용 가능성을 추구하는 사회현장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독자적 학문으로 성장, 발전하고 있다. 문헌정보학은 단순히 문헌과 정보의 병립적인 합성어가 아니라 도서관학과 정보학의 학문영역이 융합되어 새롭게 탄생한 학문분야이다.”

앞서 인용했던 <위키백과>의 설명과는 달리 학문의 성격과 내용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면서 전문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설명하고자 하는 학문의 명칭은 분명히 문헌정보학인데 문구마다 등장하는 핵심 용어는 ‘문헌정보’가 아니라 ‘문헌’이다. 물론 ‘문헌’에 대한 간략

한 개념 정의에서 ‘정보매체’ 혹은 ‘정보’라는 용어가 언급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한 용어들이 오히려 읽는 이의 혼란을 부추긴다. 무엇보다도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문헌’의 의미는 이 백과사전의 설명처럼 거창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일상적인 관점에서 문헌은 “특정한 연구를 할 때 참고가 되는 서적이나 문서”를 의미한다.³⁾ 게다가 “문헌정보학은 단순히 문헌과 정보의 병립적인 합성어가 아니라”는 친절한 설명을 첨가하고 있지만, ‘정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이 문구의 의미를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이처럼 백과사전의 설명에 따르면 문헌정보학이 도서관학과는 다른 새로운 학문인 것 같기는 한데 도대체 무엇이 ‘새로운’ 것인지 일반인의 시각에서는 혼란이 가중될 뿐이다.

그렇다면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 이러한 설명은 도대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일까? 그 근거를 추적해 보았더니, 필자의 짐작대로, 백과사전의 문구는 대부분이 한국도서관협회가 발간한 『문헌정보학용어사전』에서 차용한 것이었다. 문헌정보학자들이 그들의 전문용어사전에서 설명하는 대로 일반백과사전에서는 문헌정보학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다.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문헌정보학용어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 놓는다.

“문헌(文獻)이란 그 형태와 종류에 상관없이 정보매체에 기록된 정보의 총칭이며, (중략). ‘도서관학’과 ‘정보학’이 융합되어 ‘문헌정보학(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이 태어났다. 문헌+정보의 병립적인 합성어가 아니라 ‘문헌정보학’이라는 새로운 학문분야를 만든 것이다. 문헌정보학은 문헌과 관련된 모든 사실이나 현상을 논리적 및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사회적 적용가능성을 추구하는 학제적인 성격을 띤 독자적인 학문이라 할 수 있으며 사회현장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학문분야이다. 내용을 정보의 처리기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크게 문헌의 수집, 색인(정리, 조직), 이용의 세 가지 기능으로 대별할 수 있다.” (한국도서관협회 1996, 132~133)

“문헌과 관련된 모든 사실이나 현상을 논리적·과학적으로 규명하고, 사회적 적용 가능성을 추구하는 학제적인 성격을 띤 독자적인 학문. “문헌(文獻)이란 그 형태와 종류에 상관없이 정보매체에 기록된 정보의 총칭이며, (중략). ‘도서관학’과 ‘정보학’이 융합되어 ‘문헌정보학’이 태어났다. 문헌정보학은 사회현장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학문분야이다. 내용을 정보의 처리기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크게 문헌의 수집, 색인(정리, 조직), 이용의 세 가지 기능으로 대별할 수 있다.” (한국도서관협회 2010, 137)

전자의 인용문은 1996년의 초판에서, 후자의 인용문은 2010년의 개정판에서 발췌한 것이다. 14년의 시차를 두고 발간된 두 용어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문헌정보학에 대한 개념 정의’는 거의 동일하다. 1990년대나 2010년대나 문헌정보학자들이 생각하는 ‘학문의 정체성’에는

3) 실제로 국립국어원이 편찬한 『표준국어대사전』에도 ‘문헌(文獻)’은 “①옛날의 제도나 문물을 아는 데 증거가 되는 자료나 기록 혹은 “②연구의 자료가 되는 서적이나 문서”로 설명되어 있다.

전혀 변화가 없는 셈이다.⁴⁾ 용어사전을 편찬한 학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문헌정보학의 중심 개념은 ‘문헌’이며 ‘정보’는 차라리 부차적이다. 그런데, 앞서도 언급하였지만, 용어사전 편찬자들이 주장하는 ‘문헌’ 의미는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보편적 의미와 상당한 괴리가 있다. 그들의 개념 정의는 보편성과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학문의 내용’에 대한 설명은 너무나 조잡하고 부실하다. 1996년의 초판에서나 2010년의 개정판에서나 문헌정보학의 핵심 내용은 “정보처리의 측면에서 문헌의 수집, 색인(정리, 조직), 이용의 세 가지 기능”으로 구성된다. 문헌정보학자들 스스로 자신의 학문을 ‘기능학’으로 폄하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문헌정보학의 정체성에 대한 오해와 혼란’은 문헌정보학계 내부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이다.

학문의 정체성을 둘러싼 혼돈이 문헌정보학계 내부에서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는 교육현장인 문헌정보학과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가령, 전국 34개 문헌정보학과와 홈페이지를 조사해보면 문헌정보학의 정체성에 대한 혼돈은 더욱 심해진다. 특히, 홈페이지의 ‘학과소개’ 항목을 찾아보면, 앞서 소개한 『문헌정보학용어사전』의 설명과는 달리, 문헌정보학의 중심 개념은 ‘문헌’이 아니라 ‘정보’이다. 학과의 명칭을 제외하곤 홈페이지의 어디에서도 ‘문헌’이라는 용어는 좀처럼 마주하기 어렵다. <표 1>에 정리해 놓은 것처럼 홈페이지의 ‘학과소개’ 항목에는 ‘문헌’ 대신에 ‘정보’, ‘지식’, ‘컴퓨터’, ‘디지털’,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용어들로 채워져 있다.

<표 1> 주요 문헌정보학과 홈페이지의 ‘학과소개’ 내용

소속 대학교	소속 단과대학	학과 소개의 주요 내용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컴퓨터와 통신기술 및 뉴미디어를 포함한 정보기술의 발달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정보의 수집, 조직, 축적, 검색, 이용, 전송과 관련된 지식 커뮤니케이션 현상에 주목한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인간의 정보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과학적 방법에 대한 연구를 주도한다.
성균관대학교	문과대학	정보문제의 극복과 관련된 사회과학적 측면, 지식의 조직과 내용 및 정보의 유형 분석을 위한 인문학적 측면, 그리고 디지털도서관과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공학적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문헌정보학은 학제간의 융-복합체제 특성을 지닌 학문이라 할 수 있다.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식과 정보의 생산과 흐름, 이용에 관한 다양한 이론 연구와 함께 체계화된 실무 훈련을 통하여 최신의 지식과 정보 관리기법을 습득하고 각 분야의 지식 정보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앙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각종 정보에 대하여 신속, 정확하게 최적의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그 처리 방법을 개발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한다. 주로 정보의 발생, 성질, 행태 및 유통 현상에 관한 일반적 원리를 추구하는 순수 과학적 측면과, 효과적이며 능률적인 정보유통시스템의 설계와 운용에 관계된 응용과학적 측면을 공히 포함하고 있는 학문이라 할 수 있다.

4) 현재의 『문헌정보학용어사전』은 한국도서관협회가 1986년에 발간한 『도서관학·정보학용어사전』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한국도서관협회가 문헌정보학계를 대표하는 교수들에 의뢰하여 1986년의 용어사전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 작업을 벌인 끝에 1996년에 발간한 것이 『문헌정보학용어사전』의 초판이며, 이후 다시 수정 및 보완 작업을 벌여서 2010년에 발간한 것이 개정판이다.

그렇다고 해서 34개 문헌정보학과의 ‘학과소개’가 모두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학과마다 학문의 성격에 대한 설정은 물론이고 학문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설명에 있어서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문헌정보학의 융·복합적인 특징을 소개하는 학과가 대세인 가운데 사회과학적인 요소를 부각시키는 학과도 있고 심지어 응용과학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학과도 있다. 소속 교수들의 학문적 배경과 전공 영역 등에 따라 학과들 사이에 문헌정보학의 정체성에 관한 시각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시각의 차이가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그들이 소속되어 있는 단과대학의 차이이다. <표 1>에서도 감지할 수 있듯이, 연세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 문헌정보학과의 경우, 학과소개에서는 사회과학적 혹은 융·복합적 특징을 강조하면서도 국문과나 사학과 등과 함께 문과대학에 소속되어 있다.⁵⁾ 스스로 밝히고 있는 학과의 성격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교육현장에서조차 이렇듯 모순적인 행태가 지속되고 있는데 문헌정보학의 정체성에 대한 사회적 혼란이 어찌 해소될 수 있겠는가?

정체성의 혼란은 교육현장에서 그치지 않는다. 문헌정보학의 정체성을 둘러싼 혼란은 ‘연구현장’에서도 상존하고 있다. 가령,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연구분야분류표」에서 문헌정보학은 과학기술학, 여성학, 인지과학, 뇌과학, 감성과학 등과 함께 ‘복합학’으로 분류되어 있다. 함께 분류되어 있는 학문들에서 감지할 수 있듯이, 한국 학계에서 복합학은, 문헌정보학과 교수들이 강조하는 학제적 성격의 학문(interdisciplinary science)이라는 의미보다는 ‘신생 분야’나 ‘융합 분야’ 혹은 성격 규정이 애매한 ‘잡학’이라는 의미가 더욱 크다. 한국의 학계와 대학가에 공식적으로 명함을 내민 지 60년이 넘는 ‘유서 깊은 학문’이 자신의 학문적 정체성조차 제대로 확립하지 못하다보니 국가학술연구기관에 의해 신생 학문 혹은 잡학으로 취급받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이렇듯 쓸쓸한 현실이 문헌정보학계의 자발적인 선택에 따른 것이라는 사실이 필자의 가슴을 더욱 답답하게 한다. 한국연구재단의 학문 분류체계는 관련 학회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서 작성되고 개정되어 왔기 때문이다.

<표 2> 한국연구재단 「학술연구분야분류표」에서 문헌정보학의 분류

대분류	복합학	사회과학
중분류	과학기술학	정치외교학
	기술정책	경제학
	여성학	사회학
	인지과학	사회복지학
	뇌과학	신문방송학
	감성과학	교육학

문헌정보학	심리과학	

5) 참고로, 2018년 현재 4년제 대학교의 학부과정에 설치되어 있는 34개의 문헌정보학과 중에서 문과대학(혹은 인문대학과 인문학부)에 소속되어 있는 학과가 11개, 사회과학대학에 소속되어 있는 학과가 14개, 인문사회과학대학에 소속되어 있는 학과가 4개, 그리고 기타가 5개이다.

정리하면, 2018년 현재의 상황은 필자가 “한국 문헌정보학의 건강성 회복을 위해서는 학문적 정체성의 모호함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던 20년 전의 상황에 비해서 별로 개선되지 않았다. 개선은 커녕 문헌정보학과 교수들이 자신의 학문적 배경과 성향에 따라 문헌정보학의 성격을 규정하고 핵심 연구영역과 교육내용을 설정하는 ‘비합리적인 행태’가 오히려 심화되었다. 그리고 그렇듯 주관적인 해석과 임의적인 설정이 전국의 학과로 확산되면서 문헌정보학의 정체성에 대한 사회적 곡해와 혼란은 더욱 깊어진 것이다. 그렇다면 학문의 정체성이 더욱 혼탁해진 상황에서 20년 전에 이미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문헌정보학 연구’가 건강성을 회복할 수 있었을까? 이어지는 논의를 통해 지난 20년 동안 문헌정보학 연구는 어떠한 변화를 겪어 왔는지 자세히 들여다보자.

2. 연구의 유용성 미흡

20년 전에 필자는 한국 문헌정보학이 연구 영역에서 안고 있는 구조적인 질환으로 ‘양적 영세성’과 ‘질적 부실성’을 거론한 바 있다. 당시 필자의 조사에 의하면 1970년부터 1997년까지 한국 문헌정보학계에서 학술논문의 형태로 생산된 연구물은 약 700편에 불과하였다.⁶⁾ 교수 1인당 학술논문 생산량이 연평균 0.25편에 불과할 정도로 연구생산성이 매우 빈약하였던 것이다. 필자가 한국 문헌정보학이 “학문성을 의심하는 외부의 눈초리에서 벗어나려면 무엇보다도 연구물의 양부터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던 까닭이 여기에 있었다. 그러나 1998년 이후의 연구생산성은 드라마틱한 반전을 보이고 있다. <표 3>에 정리해 놓은 것처럼, 1998년부터 2017년까지 20년 동안 5,000편이 넘는 학술논문이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생산되어 연평균 250편이 넘는 생산량을 보여주고 있다.⁷⁾ 1998년의 연구에서 필자가 참조하였던 3개 학술지에 국한하여 비교해 보아도 학술논문의 연평균 생산량이 그 이전에 비해 무려 5배 가까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3> 문헌정보학 분야의 학술논문 생산량 (1998년부터 2017까지 누적 통계)

	문헌정보학회지	도서관·정보학회지	정보관리학회지	한국비블리아	서지학연구	합계
계재논문 수	1,244	1,409	1,063	771	755	5,242

문헌정보학 분야의 이러한 논문 생산성은 인접 학문과 비교하여도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4>의 통계가 보여주듯이, 문헌정보학계의 학술논문 생산량은 사회과학에 속하는 주요 학문분야의 학술논문 생산량을 웃도는 수준에 이르러 있다. 이처럼 학술논

6) 필자의 1998년 조사에서는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정보관리학회지, 그리고 도서관학논집(현재의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에 발표된 논문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7) 기록관리학 분야의 학회지는 조사에서 제외하였다.

문의 생산량을 놓고 볼 때, ‘문헌정보학 연구의 양적 영세성’ 문제는 이전에 비해 상당한 진척을 이룬 것으로 보인다.

〈표 4〉 사회과학 분야 7개 학과 교수의 연평균 논문 생산량 (2014~2016)

	정치외교학	사회학	심리학	행정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문헌정보학
2014	0.82	1.00	1.33	0.98	1.14	1.28	1.50
2015	0.78	1.16	1.17	0.95	0.92	1.38	1.47
2016	0.75	0.88	1.04	0.99	0.97	1.48	1.44

그렇다면 연구의 이러한 양적 성장이 연구의 질적 부실 문제를 개선하는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까? 앞서 언급하였듯이, 연구의 질적 문제에 접근하면서 필자가 특별히 관심을 두었던 요소는 ‘연구의 유용성’이었다. 문헌정보학처럼 독립적이고 배타적인 실무 현장을 갖는 응용학문에서는 실사구시적인 연구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필자는 문헌정보학 연구의 질적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는 ‘현장 중심의 이론과 기법의 개발’이라고 판단하고 있었다. 도서관을 비롯한 문헌정보 현장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가 활성화될 때, 그리고 그러한 연구가 누적되어 고유의 토착적인 이론과 기법의 개발로 이어질 때, 그 때 비로소 문헌정보학 연구의 객관적인 유용성이 대내외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기실 “문헌정보학 연구의 유용성을 제고하려면 현장 중심의 실사구시적인 연구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1990년대 초반부터 이미 학계에서 제기되고 있었다. 김정근 등이 논의의 씨앗을 뿌렸으며, 조인숙 등이 일련의 연구를 통해 공감대를 넓혀갔다.⁸⁾ 특히, 조인숙은 도서관 현장에서 학계의 연구결과를 이용하는 목적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면서 문헌정보학 연구의 유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녀의 조사에 따르면 현장 사서들이 즐겨 이용하는 논문은 “한국 도서관이 당면하고 있는 구체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논문”(40%), “문헌정보학 분야의 보편적 사실을 밝힌 논문”(37.4%), 그리고 “해외의 새로운 이론이나 기법의 한국적 응용을 시도한 논문”(20.3%)이었다. 그녀는 “일부 연구자들이 외국의 문헌정보 이론을 추적하고 검증하는데 큰 비중을 두면서 한국 도서관 현장의 문제를 소홀히 취급하고 있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한국 도서관 현장’에 초점을 맞춘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조인숙 1995).

이러한 실사구시적 입장에 공감하였기에 필자 또한 ‘도서관 현장 중심의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다.⁹⁾ 그러나 실사구시학파의 주장은 한국 문헌정보학계에서 공감대를 확산하는

8) 당시 김정근의 주장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참고하시오: 김정근, 1993. 대학도서관에 있어서 사서중심의 장서 개발은 가능한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20: 61-105.

데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하였다. 특히, 근자에는 정보학적 요소의 적극적인 수용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증가하면서 도서관 현장의 현안 해결에 비중을 두고 실사구시적인 연구에 주력하는 학자들이 1990년대보다도 오히려 감소한 상태이다. 현장 중심의 토착적인 연구가 위축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는 학계에서 생산된 연구물에 대한 현장 사서들의 질타와 불만에서도 쉽게 드러난다. 학계가 주관하는 학술대회나 세미나에 참여한 현장 사서들의 입에서는 “학계의 연구가 도서관 현장의 실정과 너무도 괴리되어 있다.”는 불멘소리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들의 불만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다음 인용문을 참조해 보자.

“대학도서관 현장의 실무자인 우리가 기존 연구에서 참고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대학도서관 현장에서 이용자교육을 정착시키고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실효적인 지식’이에요.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대학의 경영진과 교수진 그리고 비전문직 도서관장과 학생들에게 이용자교육의 당위성을 설득하는데 필요한 ‘객관적인 논리’이며, 교육대상자의 상황과 요구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토착적인 자료’이며, 도서관선진국에서처럼 사서가 이용자교육의 주체로 거듭나는데 도움을 주는 ‘실질적인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러한 ‘살아있는 지식’을 국내에서 생산된 기존 연구에서는 찾기가 힘든 거예요.”

대학도서관에서 관리자로 일하고 있는 증견사서의 이야기이다(김령은, 이제환 2017). 그녀의 말대로 도서관 현장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사서들이 필요로 하는 전문 지식은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실효적인 지식’과 ‘실질적인 방법’이다. 그런데 학계에서 생산하는 대부분의 연구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살아있는 지식과 방법’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도서관의 이용자교육을 선진국 수준으로 혁신하고자 노력하던 사서들도 좌절하고 마는 것이며, 한국 대학도서관의 이용자교육은 예나 지금이나 이용자집단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렇듯 참담한 국면이 이용자교육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다. 앞서 인용했던 『문헌정보학용어사전』에서 문헌정보학의 핵심 내용이자 도서관의 핵심 기능으로 소개하고 있는 “문헌의 수집, 조직, 이용”에 관련된 모든 영역에서 유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관련 영역에서 학술논문의 생산량이 급증한 것은 분명한데 현장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서들의 불만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것이다.

그 속내를 좀 더 깊숙이 들여다보고자 필자는 학계에서 생산한 학술논문을 주제에 따라 세분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표 5>의 통계는 1990년대 이후 현재까지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생산된 학술논문 중에서 선행연구에서 제시하는 8개 핵심 주제영역에 해당하는 논문을 조사하여 집계해 놓은 것이다(엄영애 2003, 이제환 2005, 광동철 외 2008, 노동조 2009, 노영희 외 2012). 표의 통계는 8개 주제영역 모두에서 학술논문의 생산량이 급증하였음을 보여

9) 각주 2)를 참조하십시오.

준다. 특히, ‘정보서비스’ 영역에서만 무려 1,300편에 가까운 학술논문이 생산되었고, ‘정보조직’ 영역에서도 900편이 넘는 학술논문이 발표되었다. ‘도서관경영’ 영역도 예외는 아니어서 2000년대 이후에만 1,200편에 가까운 학술논문이 쏟아져 나왔으며, 정보이용자에 관한 학술논문 또한 1,200편이 넘게 생산되었다. ‘정보자원’ 영역이나 ‘정보검색’ 영역 그리고 ‘정보기술’ 영역은 절대적인 생산량에서는 앞서 언급한 주제영역과 차이가 크지만, 2000년대 이후의 논문 생산량의 증가세는 다른 주제영역과 유사하다.

〈표 5〉 문헌정보학 학술논문의 주제별 생산 현황 (1991~2018)¹⁰⁾

연구 주제	시기	학술논문	연구 주제	시기	학술논문
정보자원	1990년대 (1991-2000)	24	도서관경영	1990년대 (1991-2000)	75
	2000년대 (2001-2010)	175		2000년대 (2001-2010)	600
	2010년대 (2011-2018)	154		2010년대 (2011-2018)	569
	합계	373		합계	1,244
정보조직	1990년대 (1991-2000)	95	이용자연구	1990년대 (1991-2000)	43
	2000년대 (2001-2010)	506		2000년대 (2001-2010)	591
	2010년대 (2011-2018)	426		2010년대 (2011-2018)	610
	합계	1,027		합계	1,244
정보서비스	1990년대 (1991-2000)	66	도서관정책	1990년대 (1991-2000)	14
	2000년대 (2001-2010)	641		2000년대 (2001-2010)	161
	2010년대 (2011-2018)	650		2010년대 (2011-2018)	198
	합계	1,357		합계	373
정보검색	1990년대 (1991-2000)	38	정보기술	1990년대 (1991-2000)	42
	2000년대 (2001-2010)	142		2000년대 (2001-2010)	255
	2010년대 (2011-2018)	89		2010년대 (2011-2018)	134
	합계	269		합계	431

그러나 논문 생산량에 있어서 이렇듯 눈부신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한국 도서관 현장의 서비스가 도서관전진국 수준에 근접해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보자원’ 영역에 있어서 실물장서의 품질과 관리 그리고 전자자료의 구독 비용은 한국 도서관계의 가장 큰 골칫거리로 부각되어 있다. ‘정보조직’의 실무 현장은 사정이 더욱 심각하다. 한국 도서관 현장에서 편목업무는 대폭 축소되어 무늬만 남아있으며, 정보조직의 또 다른 축인 색인 작성은 사서의 업무에서 아예 배제되어 있다. ‘정보서비스’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기본적인 참고서비스조차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세기 넘게 지속

10) 이 통계는 DBpia에 대한 주제검색을 통해 산출하였다. 주제검색을 위해 사용한 탐색어는 다음과 같다: 정보자원 영역은 장서개발, 장서관리, 전자자료, 전자저널 등; 정보조직 영역은 정보조직, 자료조직, 분류, 편목, 색인, 메타데이터 등; 정보서비스 영역은 정보서비스(혹은 봉사), 참고서비스(혹은 봉사), 정보조사제공, 이용자교육, 독서지도 등; 정보검색 영역은 정보검색, 자동색인, 자동분류, 검색모형 등; 도서관경영 영역은 도서관경영, 도서관운영, 도서관관리, 정보센터경영 등; 도서관정책 영역은 도서관정책, 도서관정보정책, 정보정책 등; 이용자연구 영역은 이용자연구, 정보요구, 정보추구, 정보이용, 정보행태 등; 정보기술 영역은 정보기술, 정보공학, 도서관자동화, 도서관전산화, 디지털도서관 등.

되고 있다. ‘도서관경영’ 또한 마찬가지이다. 한국의 도서관들은 여전히 도서관의 철학과 핵심 기능조차 제대로 모르는 비전문가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용자연구’의 결과가 한국의 도서관서비스를 이용자 친화적으로 변모시키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한 것 같지도 않다. 도서관서비스에 대한 이용자들의 기대와 평가는 예나 지금이나 밑바닥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이제환 2018).

정리하면, 필자가 ‘문헌정보학 연구의 유용성’ 문제를 거론했던 1998년 이후 현재까지 약 5,000편을 상회하는 학술논문이 쏟아져 나올 정도로 문헌정보학 연구의 외형은 급성장하였다. 그 결과, 인접 학문들과 견주어도 연구생산성만큼은 손색이 없는 수준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 성장이 한국 문헌정보학의 이론적 기반을 강화하고 문헌정보 현장의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그다지 유용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문헌정보학계의 학술지에는 1998년 이전이나 이후에나 한국사회에서 생산된 정보자원의 속성과 원리를 탐구하는 기초 연구는 드물고, 한국인의 정보행태적 특성과 변인에 주목하는 이론 연구는 차라리 희귀하다. 그리고 문헌정보 현장은 선진국 수준의 정보서비스를 구현하는데 있어 구조적인 장애가 되어온 묶은 과제들로 인해서 현재까지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처럼 문헌정보학 연구가 20년 전에 비해 체격이 커졌는지는 몰라도 체질이 튼실해졌다는 증거를 찾기 어려운 것이 2018년 현재의 실정이다.

3. 교육의 실효성 부족

한국 문헌정보학 교육의 고질적인 질환으로 필자가 지목하였던 것은 ‘교육과정의 비합리성’과 ‘교육내용의 부적절성’이었다. 돌아보면, 미국의 대학원에서 LIS를 처음 접했던 필자는 한국 문헌정보학 교육과정이 2년제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에 혼재하고 있다는 사실과 문헌정보학 교과과정이 주로 기능적 성격의 교과목들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에 적지 않게 낙담하였던 것 같다. 비합리적인 교육과정과 부적절한 교과과정이 한국 문헌정보학 교육을 위축시키고 문헌정보학과의 입지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주범이라고 판단하였던 것이다. 그로부터 20년이 흐른 현재, 한국 문헌정보학 교육의 건강성 문제에 접근하는 필자의 시각에는 다소 미묘한 변화가 생겼다. 교육과정의 비합리성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은 변함이 없지만, 기능 중심적 교과과정을 비판하면서 이론 교육을 강화할 것을 주창했던 과거의 시각에는 변화가 왔다. 이론 중심의 교육에 집중하기 보다는 문헌정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 역량을 갖추도록 교육하는 것이 한국 문헌정보학 교육의 건강성을 회복하는데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¹¹⁾ 이렇듯 ‘교육의 실효성’ 문제는 한국 문헌정보학 교육의 건강성을 가늠하는데 있어서 필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척도가 되어 있다.

11) 다수의 제자들이 도서관계로 진출하고, 새내기 사서들의 실무 역량에 대한 중견 사서들의 비판이 거칠어지는 것을 강단에서 지켜보면서 필자에게 생겼던 변화이다

이러한 시각의 변화를 반영하면서 필자는 지금부터 한국 문헌정보학 교육의 건강성 문제에 다시 접근하고자 한다. 논의의 초점은, 문헌정보학 교육과정의 현장의 인력 수요에 합리적으로 대처하고 있는지, 그리고 문헌정보학 교육내용이 현장의 인력이 필요로 하는 역량을 배양하는데 실효적인지를 가늠하는데 주어질 것이다.

가. 교육과정의 합리성은 제고되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은 문헌정보학에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한국사회에서 문헌정보학 전공자로 공인 받을 수 있는(그래서 사서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교육과정은 2년제 전문대학, 4년제 대학의 학부, 일반대학원과 특수대학원, 사서교육원, 그리고 학점은행제에 이르기까지 혼재되어 있다. 근자에 들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나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등에서 운영하는 학점은행제까지 추가되었으니 20년 전보다도 상황은 오히려 악화되었다.¹²⁾ 이러한 교육과정의 혼재와 난립은 사서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인력의 과잉공급으로 인한 새로운 질병을 야기하고 기존 질병을 악화시키고 있다. 무엇보다도 인력의 과잉공급 현상이 구조화되면서 사서직의 질적 저하가 가속화되고 있다. 사서의 직업적 위상은 추락하고 있으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양극화 현상은 심화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전체 사서집단의 실무 역량 또한 급속히 약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문제가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으니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학계의 노력이 그동안 어찌 없었겠는가? 지난 20년 동안 학술연구를 통해서도 물론이고 각종 학술대회나 정책세미나 등을 통해 교육과정에 대한 개선 요구는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그 결과, 국가 차원에서 생산된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교육과정의 개혁이 주요 정책과제의 하나로 포함될 정도로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학계와 현장의 공감대는 확산되었다. 그러나 그렇듯 광범위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의 혼재와 난립’ 현상은 오히려 악화되어 ‘혁명적인 처방’이 강구되지 않는 한 회복이 어려운 만성적 질환이 되어 버렸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문제 제기와 개선 요구가 끊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비합리적인 교육과정은 개선은커녕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일까? 교육과정 문제의 본질에 대한 탐구와 주요 원인 찾기 그리고 실효적인 해결책에 대한 논의는 다음 장에서 이어가고자 한다.

나. 교육내용의 실효성은 강화되었는가?

교육과정의 개선에 대한 요구와 함께 교육내용을 시대의 변화에 맞게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

12) 필자의 조사에 의하면, 2018년 현재, 학위와 함께 사서자격증을 수여하는 문헌정보학 정규 교육과정은 5개의 전문대학(입학정원 약 430명), 34개의 4년제 대학(입학정원 약 1,350명), 그리고 31개의 일반대학원과 13개의 교육대학원이 난립하고 있다. 여기에 3개의 사서교육원(입학정원 600명)과 4개의 학점은행제 평생교육원(입학정원 약 1,000명)까지 추가되다 보니 매년 약 3,000명이 훨씬 넘는 사서자격증 소지자가 배출되고 있다.

또한 전개되었다. 교육내용의 개선을 위한 학계의 노력은 무엇보다도 교과과정(curriculum)의 개편에 집중되었다. 기존 교과목에 정보학적 요소를 가미하려는 노력이 대부분의 문헌정보학과에서 전개되었으며, 최소전공학점제에 대처하기 위해 교과과정의 표준안을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 학계 일부에서 진행되었다. 주지하다시피 전자의 노력은 교과목의 명칭에 ‘정보’자를 대거 도입하는 것으로 나름대로 결실(?)을 맺었지만, ‘표준교과목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여러 제안들은 학계의 논의과정조차 거치지 못한 채 연구결과물로만 남겨져 있다(엄영애 2003, 이제환 2005, 박동철 외 2008, 노동조 2009, 노영희 외 2012).

필자는 표준교과과정의 개발이 실행으로 이어지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는 ‘개발 논리의 합리성 결여’에 있다고 보고 있다. 즉, 표준교과과정을 개발함에 있어서 ‘수요자보다는 개발자의 논리’가 부각되었으며, 한국 대학교육의 고유 변인에 대한 고려보다는 미국의 교과과정에서 모범 답안을 차용하려는 경향이 짙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¹³⁾ 특히, 개별 학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현장의 요구를 신중히 참조하여 만들어진 혁신안이 아니라 기존 교과과정의 틀을 전반적으로 유지하면서 현직 교수들의 담당 교과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소극적인 개편안에 머물렀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게다가 거의 모든 연구가 교수의 개별적인 과제나 특정 기관이 지원하는 연구과제 형태로 시작되고 종료되다보니 연구결과에 대한 학계의 논의과정조차 제대로 거치지 못했던 것 또한 실패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교과과정의 표준안조차 확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최소전공학점제가 뿌리를 내리게 되자 문헌정보학 교육의 실효성을 둘러싼 부정적 기류는 더욱 확산되었다. 부정적 기류가 확산될 수밖에 없었던 일차적인 이유는 문헌정보학과들 사이에 전공 교과목의 편성과 운영에 있어서 심각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전국 34개 문헌정보학과의 교과과정표를 분석해 보면 문헌정보학의 핵심 영역으로 분류되는 교과목들조차 필수 교과목으로 지정하지 않은 학과들이 적지 않다.¹⁴⁾ 이러한 경향은 앞서 언급하였던 4개 주요 문헌정보학과에서 더욱 짙게 나타나는데, 특히 성균관대학교 이화여대의 문헌정보학과는 졸업 요건으로 지정해 놓은 필수 교과목이 하나도 없는 상태이다. 연세대 문헌정보학과의 경우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아서, 필수 교과목을 지정하지 않은 가운데 전공 교과목 중에서 3학점만 이수하면 졸업이 가능하다. 그나마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만이 문헌분류론, 참고정보서비스론, 정보검색론, 도서관경영론을 졸업을 위한 필수 교과목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을 뿐이다.

이처럼 문헌정보학의 핵심 주제에 관련된 교과목조차 이수하지 않은 학생들이 문헌정보학과를 졸업하고 있으며, 최소전공학점만 이수하면 누구나 문헌정보학과 졸업자로서 국가에서

13) 한국과 미국의 문헌정보학 교육은 교육프로그램의 수준과 편제 그리고 교수진의 규모와 전문성에 있어서 비교조차 불가능한 상태임에도 그러한 주장이 반복되어 왔다.

14) 표준교과과정의 개발에 관한 기존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제안하고 있는 전공필수 교과목에는 정보조직(자료조직), 장서개발(장서관리), 정보서비스(참고서비스), 정보검색, 도서관경영 등이 포함되어 있다.

발행하는 사서자격증을 받는 제도가 고착화되고 있다.¹⁵⁾ 게다가 사서임용제도조차 진근대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다 보니 전문 역량은 차치하고 기본적인 지식조차 갖추지 못한 인력이 도서관계로 진출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모순적인 상황이 유지되고 있다 보니, 사서직의 전문 역량이 약화되고 그로 인한 입지가 위축되고 있는 현실을 우려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문헌정보학의 교육의 실효성’ 문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도서관의 철학적 가치와 사회적 의미를 실현하고자 노력해온 현장 사서라면 이 문제에 대한 우려와 안타까움은 클 수밖에 없는 것이다. 현장 사서들의 그러한 우려는 다음 인용문에서 뚜렷하게 드러난다.

“도서 선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출판사다. 명작의 경우 같은 작품이라도 여러 출판사에서 출간되고 있기 때문에 그 중 가장 좋은 출판사의 좋은 판을 골라내는 것은 사서의 기본적인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설령 처음 보는 출판사라고 할지라도 해당 출판사의 다른 출판물을 살펴보거나 출판사 서평 등을 참고하면 직접 책을 보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판단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정도의 기초 지식조차 없이 그야말로 눈에 보이는 대로 수서하는 신규 사서를 보면 무엇을 배웠는지 의심스러울 때가 있다. 특히 현장수서를 하던 과거와는 달리 인터넷을 통해 도서를 판단하고 선택해야 하는 현 상황에서 좋은 책에 대한 지식과 안목은 더욱 필요하며 한정된 예산으로 좋은 장서를 구성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다소 수고스럽더라도 예산을 나누어 매달 정기 수서를 하고 이용자 희망도서를 즉시 처리하려는 자세와 장서의 구성에 대해 고민하는 철학은 대학의 교육과정에서부터 배양되어야 한다.”
(박현영 2010).

문헌정보학 교육의 부실성 문제는 교과과정의 편향적인 편성과 운영에서 그치지 않는다. 교육의 주체인 교수집단의 영세성 또한 교육의 내용을 부실하게 만들어온 주요 변인이다. 앞서도 언급하였지만, 대부분의 문헌정보학과는 4명 내외의 전임 교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핵심 교과목을 전담할 전임 교수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¹⁶⁾ 설상가상으로 ‘전임 교수들의 교육역량’이 과거에 비해 낮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후는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교수집단의 세대교체가 폭넓게 진행되면서 핵심 교과목을 전담하는 교수진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있다. 기존 TO가 없어지기도 하지만 신규 교수 인력을 기록관리학이나 정보공학의 영역에서 충원하는 학과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많은 학과에서 교수집단의 인브리딩이 심화되고 있으며, 심지어 전공자가 아닌 인력의 유입까지 늘어나면서 ‘교수집단의 전체적인 교육역량’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¹⁷⁾ 이렇듯 전임 교수의 양적

15) 사서자격제도의 개선을 위한 시안 또한 여러 차례 개발되고 제시되었지만 모순적인 사서자격제도는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다.

16) 2018년 현재, 34개 4년제 대학의 문헌정보학과 전임교수는 155명으로 학과 평균 4.4명, 5개 전문대학 문헌정보학과 전임교수는 15명으로 학과 평균 3명이다.

빈곤과 질적 저하는 전공 교과목의 다양한 개설과 내실 있는 운영을 어렵게 만들면서 교육의 내용적 실효성을 더욱 낮추고 있는 것이다.

교육내용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교육도구의 품질과 관련해서도 이어진다. 무엇보다도 문헌정보학계에서 생산한 전공 교재들을 세밀히 검토해보면 문헌정보학 교육이 내용적으로 부실할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이유가 명확해진다. 전공 교재들이 개론서와 몇몇 핵심 교과목에 편중되어 있다 보니 여타 교과목들은 전공 교재조차 변변하지 않다. 한편에서는 과잉이 다른 한편에서는 품귀라는 불균형 현상이 심각한 것이다. 그러나 보다 심각한 문제는 교재의 내용적 품질에서 야기된다. 교육의 현장은 한국이고 적용의 대상도 한국인데 교재에 담겨있는 내용은 대부분 미국을 비롯한 도서관선진국의 사례이다. 한국의 문헌정보 현상에 관한 소개나 설명은 계륵처럼 첨가되어 있을 뿐이다. 특히, 한국사회의 토착적인 정보자원이나 한국인의 고유한 정보행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교재는 차라리 희귀하다. 교육도구의 실정이 이렇다보니 전공 교과목을 모두 이수하여도 한국의 문헌정보 현상을 이해하고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전공 지식은 머리에 제대로 남아있지 않는 것이다.

전공 교재의 부실한 속내는 전공 입문서(즉, 개론서)에서부터 여지없이 드러난다. 전공 입문서의 종도 많지만 저자(들)의 학문적 배경과 전공에 따라 입문서의 체제와 구성 그리고 내용의 서술에서 커다란 차이가 존재한다. 물론 학자에 따라 문헌정보학에 대한 관점과 시각이 다를 수 있으니 그들의 저술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저술의 성격이 전공 입문서임을 고려할 때 저술마다 학문의 철학과 목적에 대한 해석이 상이하고 학문의 핵심 영역에 대한 설정과 설명에서 차이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후학들을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전공 입문서만큼은 그 체제와 구성 그리고 내용의 서술에 있어서 최대한의 객관성과 표준성이 담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시각에서 볼 때, '교재의 객관성과 표준성 제고'를 목표로 한국문헌정보학회가 주도하여 발간한 입문서인 『최신 문헌정보학의 이해』는 문헌정보학 교재의 보편적 품질과 관련하여 여러모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주지하다시피 2004년에 초판이 발간된 『최신 문헌정보학의 이해』는 수십 명의 문헌정보학과 교수들이 참여하여 만든 최초의 전공 입문서다. 이 공동 저작물은 그동안 몇 차례의 개정 작업을 거쳤으며, 2018년 현재, 대부분의 문헌정보학과에서 '개론' 강좌의 주교재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입문서마저도 그 내용의 객관성과 서술의 일관성에 있어서 심각한 결함을 안고 있다는데 있다. 그러한 결함 중에서 압권은 학계가 주도하여 생산한 입문서임에도 불구하고 문헌정보학의 학문적 정체성에 대한 설명조차 제대로 수록하지 않고 있다는데

17) 문헌정보학과 전임 교수임에도 불구하고 교육과 연구 행위에서 문헌정보학적인 요소를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특히, 문헌정보학 학부과정을 이수하지 않고 대학원 교육과정의 이수를 통해 문헌정보학계에 진입하는 인력 집단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진다. 문헌정보학에 대한 학문적 기초가 부족하다보니 자신이 전공한(그래서 자신을 갖는) 학문을 중심으로 연구도 하고 교육도 하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문헌정보학 연구라고 보기 어려운 정체불명의 논문을 생산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폐해는 강단으로 그대로 옮겨져서 문헌정보학 교육의 실효성은 물론이고 전문성마저 부실하게 만들고 있다.

있다.¹⁸⁾ 게다가 40명이 넘는 교수들이 쓴 조각 글들을 체계적인 편집 작업조차 없이 단행본의 형태로 엮어내다 보니 그 체제와 항목의 구성이 합리적이 않으며 내용의 중복 또한 곳곳에서 드러난다.¹⁹⁾ 이렇듯 학계가 발간한 전공 입문서조차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는커녕 오히려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상태에서 문헌정보학 교육의 내실화가 어찌 진척될 수 있겠는가?

정리하면, 필자가 20년 전에 ‘한국 문헌정보학 교육’에 내재하는 구조적 질환으로 지적 하였던 교육과정의 비합리성 문제와 교육내용의 부적절성 문제는 개선은커녕 오히려 악화 된 상태이다. 교육과정의 경우, 사서교육원이나 평생교육원의 ‘속성 교육과정’이 증가하면서 피교육생의 규모에 있어 대학의 ‘정규 교육과정’을 추월하는 어처구니없는 현상이 벌어 지고 있다. 그로 인해 4년제 문헌정보학과와 존재 가치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교육내용의 경우에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최소전공학점제가 뿌리를 내린 가운데 교과과정 표준화마저 이루지 못하다보니 핵심 교과목을 이수하지 않고도 문헌정보학 학위를 받고 사서자격증까지 받는 모순적인 상황이 고착되어버렸다. 여기에 교수인력의 역량 약화와 교육도구의 부실성까지 겹쳐지면서 한국 문헌정보학 교육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더욱 증폭 되고 있다.

Ⅲ. 한국 문헌정보학의 건강 되찾기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한국 문헌정보학은 1998년에 비해 전혀 건강해지지 않았다. 세월의 흐름과 함께 나잇살이 든 흔적은 여기저기 보이는데 기존의 병증이 수그러들기는커녕 오히려 악화되었다. 20년 전에는 그래도 ‘문헌정보학’이라는 새로운 집으로 이사한지 몇 년 되지 않았으니까 세월이 흐르면 차츰 ‘새집증후군’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거란 ‘우려어린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우려는 현실이 되었고 기대는 사라져 버렸다. 학문의 정체성을 둘러싼 혼란은 고착되었으며, 연구의 외형은 몸집이 불었지만 내용적 유용성에 대한 우려는 깊어졌다. 게다가 교육과정의 혼재와 난립이 확산되면서 ‘정규 교육과정’인 문헌정보학과와 입지가 흔들리고 있으며, 교육의 내용적 부실이 깊어지면서 문헌정보학 교육의 실효성에 대한 내외적 비판이 증가하고 있다. 학문의 건강상태가 이렇듯 부실하기에 대학가에 밀려오고 있는 구조조정의 쓰나미 앞에서 대부분의 문헌정보학과들은 또 다시 휘청거리는 것이며, 특히 체격의 왜소함에 더해져 체력마저 허약한 지방 사립대학의 문헌정보학과들은 존재의 위기를 맞아

18) 반면에 ‘문헌학’과 ‘정보학’에 대한 설명은 책의 곳곳에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19) 특히, 장과 절마다 논의의 깊이는 물론이고 서술의 수준에서 상당한 차이가 나는 글들이 짜깁기되어 있다. 명색이 학계를 대표하는 학회가 만들어낸 전공 입문서인데 ‘개정증보2판’이 나오기까지 책의 내용에 대한 전 반적인 검증과 보완 작업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시름이 깊어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 문헌정보학은 시름시름 연명하다가 결국에는 역사의 그늘로 사라지고 말 것인가? 특히, '4차 산업혁명'을 운운하는 자들이 예견하는 것처럼 문헌정보 현장의 전문 인력은 인공지능에 의해서 대체되는 첫 번째 직업군에 속할 것이고, 그러한 인력의 양성을 위해 존재하던 문헌정보학 교육과정은 소멸되거나 기껏해야 1~2년짜리 '속성 과정'으로 남겨질 것인가? 물론 현재로서는 무엇 하나 확실한 것은 없다. 그러나 이 글의 모두에서 밝혔듯이, 이번에 대학가에 밀려오고 구조조정의 압박이 과거와는 다른 차원인 것만은 분명하다. 이러한 우려가 필자만의 과도한 '건강 염려증'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님을 지방의 사립대학 교수들은 이미 체감하고 있다. 물론, 상대적으로 안전한(?) 국립대학에 자리하고 있는 필자의 처지에서, 게다가 정년이 가시권에 들러와 있는 필자의 입장에서 이번 구조조정이 아무리 역대급이라고 한들 그것이 무슨 근심거리가 되겠는가? 단지, 청춘을 받친 학문에 대한 우려와 만정을 쏟은 후학에 대한 염려가 밤잠을 설치게 만들 뿐이다.

그래서 필자는 다시 글을 이어간다. 어떻게 해야 학문의 급속한 위축과 궁극적 소멸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한국 문헌정보학이 살아날 수 있을까? 비록 때 늦은 감은 있지만 필자는 다시 한국 문헌정보학이 앓고 있는 만성적 질환을 다스리기 위한 처방을 찾아 나서고자 한다. 20년 전의 소장학자 시절에 비하면 조금은 밝아진 시력을 가지고, 학문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연구의 유용성을 제고하고, 교육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방안을 차분히 모색하고자 한다.

1. 학문의 정체성 확립

필자는 가끔 스스로에게 묻곤 한다. “문헌정보학자로서 내가 추구해온 가치는 무엇인가?” 차라리 도서관학자라면 혹은 필자의 학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도서관정보학 박사(Ph.D.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라면 명함에 어울리는 그럴듯한 답변을 늘어놓으려만, 문헌정보학과 교수로서 만25년을 보내고도 답변의 궁색함은 여전하다. 고백하지만, 필자에게조차 문헌정보학이라는 용어에 대한 낯설음은 아직 남아 있고, 특히 한국 문헌정보학이 추구하는 학문적 가치에 대한 의문은 남아있다. 문헌정보학자인 필자의 곤혹스러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나는 사회과학자인가 혹은 한국 학계가 규정하고 있는 대로 복합학자인가?” 하긴 사회과학대학 건물에서 사반세기 동안 거주하고 있으면서도 동료들과의 ‘학술적인 소통’은 제한적이다. 분명히 내 집인데 셋방살이의 어색함과 불편함이 아직도 남아있다. 필자는 다시 스스로에게 묻는다. “문헌정보학자로서 나만이 갖고 있는 독점적인 지식 기반은 무엇인가?” “사회과학대학의 동료 교수들이 귀를 기울일 만한 나만의 전공 이야기는 과연 무엇인가?”

필자는 ‘문헌정보학’은 ‘고유명사’이며 한국의 도서관학자들이 만들어낸 ‘기형 학문’으로 보고 있다.²⁰⁾ 한국의 사서와 문헌학자 그리고 미국식 도서관학을 전공한 학자들이 모여서 ‘한

국식 도서관학'을 만들고자 했지만, 그들의 합작 노력이 미처 뿌리도 내리기 전에 새로운 텃밭(즉, 미국식 도서관정보학)으로 이주하고자 했던 선학들의 조급증이 빚어낸 '기형 학문'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그렇지 않고 미국의 LIS를 직수입하여 그대로 모방하고자 했다면 학문의 명칭은 '도서관학'의 연장선에서 '도서관정보학'이 되었어야 했다. 한국보다 앞서 미국으로부터 도서관학을 받아들였고 미국 학계의 변화에 따라 다시 '도서관정보학'으로 개명한 일본 학계처럼 말이다. 따라서 문헌정보학이라는 학명을 학계가 스스로 선택하였다면 '새로운 학문'의 목적과 성격부터 명확히 설정했어야 했다. 그런데 문헌정보학이라는 새로운 학명을 고집하면서도 미국의 '도서관정보학전문용어사전'에 수록된 내용을 그대로 옮겨와서 학문의 목적과 성격을 묘사하려고 했던 것은 크나큰 잘못이었다. 그렇듯 자가당착적인 행위로부터 한국 문헌정보학의 학문적 정체성을 둘러싼 혼란이 시작되었고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와서 학문의 명칭부터 다시 바꾸자는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이제라도 학문을 대표하는 핵심 개념을 확립하고 학문의 목적과 성격 그리고 배타적인 영역을 명확히 설정하여 한국 문헌정보학의 정체성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주장을 할 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는 밝혀야 하겠기에 '문헌정보학'이라는 학명의 태생적 오류를 지적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필자는 한국 문헌정보학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작업은 학문을 대표하는 핵심 개념을 새롭게 설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문헌정보학의 핵심 개념으로 '문헌정보'를 계속하여 사용하는 것은 정체성의 혼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앞서 논의하였듯이, 정체성을 둘러싼 혼란이 '문헌정보'라는 합성어의 애매모호함에서 비롯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대부분의 문헌정보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보'를 학문의 핵심 개념으로 삼아야 한다는데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정보라는 용어는 개념 자체가 다양하고 복합적일 뿐만 아니라 정보가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학문 분야나 영역이 한국사회에는 너무도 많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사회와는 달리 한국사회에는 문헌정보학이 아니라 컴퓨터학이 정보와 관련된 학문의 중심이라는 인식이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하기에 필자는 정보가 아니라 '정보자원(information resource)'을 문헌정보학을 대표하는 핵심 개념으로 삼자고 제안한다. 정보자원, 특히 기록물 형태의 정보자원에 관해서만큼은 문헌정보학계의 전문성과 영향력이 독보적이라는 판단에서이다. 찬찬히 생각해 보면, 한국사회에서 동서고금의 각종 정보자원을 수집하고, 정리하고, 보존하고, 제공하는 행위와 그에 관련된 조직의 활동과 생태에 주목하면서 정보자원의 역사와 철학 그리고 본질과 속성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교육해온 학문은 문헌정보학밖에 없다. 그러하기에 필자는 정보가 아니라 정보자원이 문헌정

20) 한국사회에서는 유사한 형태의 기형 학문(혹은 학과)들이 존재한다. 가령, 언어정보학, 언론정보학, 경영정보학, 관광정보학, 생물정보학 등, 그 내용은 수입학의 일부이지만 학문의 원조에는 존재하지 않는 변칙적인 학명과 학과들을 한국의 대학가에서는 종종 볼 수 있다.

보학을 대표하는 핵심 개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정보자원이라고 해서 거창한 것은 아니다. 필자가 주창하는 정보자원은 단일 문서에서부터 디지털 정보시스템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이 일상을 영위하면서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겪게 되는 각종 고민을 해결하는데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회적 자원(resource)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일상적 혹은 업무적 고민에 봉착하였을 때 사람들은 무언가 결정하거나 바람직한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그럴 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정보자원이다. 이렇듯 사람들이 일상이나 업무와 관련하여 당면하는 다양한 고민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자원에 대해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교육하는 것은 학문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특히, 그러한 연구와 교육의 대상이 되는 정보자원의 중심에 한국사회가 토착적으로 생산한 정보자원이 자리하고 있을 때 한국 문헌정보학의 목적은 더욱 분명해지고 그 가치는 대내외적으로 독보적이 되는 것이다.

정보자원을 문헌정보학의 핵심 개념으로 설정하면 학문의 내용과 성격 또한 명확해진다. 앞서 언급하였던 ‘정보자원에 관련된 모든 현상’에 더해서 그러한 ‘정보자원의 이용자에 관련된 모든 현상’이 문헌정보학을 연구하고 교육하는 사람의 주요 관찰 대상이 되는 것이다. 물론 한국사회의 정보자원과 한국사회의 이용자가 관찰의 일차적인 대상이어야 함은 불문가지이다. 이처럼 정보자원과 그 이용자집단이 학문의 주요 관찰 대상이 되고, 양자를 연계하는데 필요한 이론과 기법을 연구하고 교육하는 것이 학문의 핵심 내용이 될 때, 사회과학으로서 문헌정보학의 학문적 성격은 보다 분명해 지는 것이다. 일부 문헌정보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연구와 교육의 대상이 고문헌과 그 이용자라고 해서 학문의 성격이 인문학이 되는 것이 아니며, 데이터베이스와 그 이용자라고 해서 학문의 성격이 정보공학이 되는 것이 아니다. 고문헌과 데이터베이스는 모두 정보자원이며 문헌정보학은 그러한 정보자원과 이용자집단에 주목하는 ‘사회과학’인 것인 것이다.

사회과학으로서의 대내외적 입지를 강화하려면 문헌정보학만의 고유하고 독점적인 지적 자산의 축적을 위해 학계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앞서 언급하였지만, 문헌정보학계가 집단의 역량을 집중하여 축적해야 할 지적 자산은 “정보자원의 유통과 관리에 있어서 이용자들의 정보행태를 최적의 상태로 반영할 수 있는 이론과 기법”이어야 한다. 특히, 한국적 상황에 적합한 실사구시적인 이론과 기법의 축적은 한국 문헌정보학의 입지와 위상 강화를 위해 대단히 중요하다. 특히, 후자를 위해서는 한국의 정보자원과 정보이용자에 대한 실증적 데이터의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기에 문헌정보 학계와 문헌정보 현장의 소통과 협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이다. 이처럼 현장과의 협력을 기본으로 삼고서 한국사회에서 유통되는 정보자원과 정보이용자에 관해 연구하고 교육하는 것이 한국 문헌정보학의 기본 내용이어야 하며, 그를 기반으로 정보자원의 유통과 관리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인력과 조직 그리고 시스템에 관한 토착적인 지식을 구축하는 것이 한국 문헌정보학의 주요 내용이어야 한다.

이제 기본 원칙에 대한 제언은 이쯤에서 접고, 한국 문헌정보학계가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몇 가지 현안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학문의 정체성에 관련된 『문헌정보학용어사전』의 오류를 바로잡는 작업을 학계 차원에서 서둘러 줄 것을 당부한다. 그래야 비로소 일반 백과사전의 오류도 수정될 수 있을 것이며 문헌정보학에 대한 세인의 오인과 곡해도 바로 잡힐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한국 문헌정보학계를 주도해온 학과들부터 자신의 학문적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정체성에 걸맞게 학과의 입지를 구축하고 운영해 갈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 현재는 물론이고 미래의 문헌정보학도들이 갖게 될지도 모르는 학문적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학문과 학과의 건강성 회복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특히, 불과 4~5명의 교수로 구성된 영세한 학과들이 수십 명의 교수로 구성된 미국의 ISchool을 모방하려는 어리석은 행위는 자제할 것을 간곡히 권유한다. 국제화도 좋고 국제교류의 확대도 좋지만, “뱀새가 황새를 쫓아가려는 과욕과 오판”으로 인해 한국 문헌정보학의 건강이 더욱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²¹⁾

마지막으로 필자는 한국연구재단의 학문분류체계에서 복합학으로 분류되어 있는 문헌정보학을 사회과학으로 변경하는 작업에 학계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표 6> 참조). 국가의 학술단체들, 가령, 대한민국학술원에서조차 문헌정보학을 이미 사회과학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심지어 심리학의 경우 이미 오래 전에 복합학에서 사회과학으로 변경하지 않았는가? 학계는 무엇보다도 문헌정보학의 ‘복합성(혹은 융합성)’을 강조하면서 “서지학+도서관학+정보학+기록관리학=문헌정보학”이라는 구태의연한 공식에 집착하는 행태부터 버려야 한다. 가령, 컴퓨터학이 학문의 뿌리였던 전산학과는 온전히 다른 차원의 학문인듯이, 문헌정보학은 도서관학의 옆줄에 서지학과 정보학과 기록관리학을 늘어놓은 ‘우산학’이나 ‘잡학’이 아닌 것이다. 한국의 문헌정보학은 도서관학을 근간으로 하여 ‘한국 고문헌에 관한 서지적 연구’, ‘정보이용자에 대한 행태적 연구’, ‘정보 처리와 관리를 위한 기술적 연구’, 그리고 ‘보존 가치가 있는 문서의 관리를 위한 연구’ 등을 보강하여 새롭게 태어난 학문이 아니던가?

<표 6> 한국연구재단 「학술연구분야분류표」의 대분류 수정안

대분류	중분류		대분류	중분류
복합학	과학기술학	⇒	사회과학	정치외교학
	기술정책			경제학
	여성학			사회학
	인지과학			사회복지학
	뇌과학			신문방송학
	감성과학			심리과학

문헌정보학	문헌정보학			

21) 평균 4.4명의 교수로 구성되어 있는 한국의 문헌정보학과에 미국의 ISchool 체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일부 교수들의 치기어린 행태에 필자의 가슴은 안타까움을 넘어서 분노로 채워져 간다.

2. 연구의 유용성 제고

앞서 설명하였듯이, 한국 문헌정보학 연구가 유용성을 담보하는데 성공적이지 못했던 일차적인 이유는 한국의 토착적인 정보자원과 한국인의 고유한 정보행태를 연구하는데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적 현상’에 대한 무관심과 소극성으로 인해 문헌정보 현장은 물론이고 인접 학계에서도 주목할 만한 ‘지적 자산’을 축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국사회가 생산한 정보자원과 한국인의 정보행태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데 어찌 “정보자원의 유통과 관리에 있어서 한국인의 정보행태를 최적의 상태로 반영할 수 있는 이론과 기법의 개발”이 가능할 수 있었겠는가? 따라서 한국사회의 토착적인 ‘정보자원’과 ‘정보이용자’가 한국 문헌정보학 연구의 일차적인 대상이 되어야 하며, 그러한 연구결과를 축적하여 한국의 정보자원과 정보이용자의 본질과 속성을 설명할 수 있는 토착적인 이론의 개발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토착이론이 문헌정보 현장의 발전을 위한 실무 기법의 개발로 이어질 때 비로소 한국 문헌정보학 연구의 유용성은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문헌정보학 연구의 유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은 ‘한국적 현상에 대한 기초 연구의 활성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다.

기초연구의 활성화가 유용한 결실로 이어지려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작업이 있다.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는 연구의 주제영역을 체계화하는 작업이 그것이다. 한국 문헌정보학계와 같이 연구 인력의 규모가 영세한 상태에서 연구의 전문성과 생산성을 동시에 제고하기 위한 선제적 조처는 연구의 주제영역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²²⁾ 연구의 주제영역이 명확히 설정되어 있어야 연구 인력의 합리적인 조정과 지원이 가능해지며 연구 결과의 체계적인 평가와 관리가 용이해지는 것이다. 따라서 연구의 주제영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학계가 주력해야 하는 당면 과제는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연구분야분류표」에 설정되어 있는 문헌정보학의 소분류와 세분류의 내용부터 바로잡는 것이다. 즉, 현재의 분류 내용을 문헌정보학의 핵심 주제와 문헌정보 현장의 요구에 적합하게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작업부터 서둘러야 한다. 그러한 작업의 ‘단초’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존의 분류안에 대한 수정안을 <표 7>에 제시하였다.

22) 앞서 언급하였듯이 전임 교수의 규모는 20년 전보다 오히려 감소하여 170명 내외에 머물러 있으며, 그들의 연구를 보조하는 대학원생들의 연구역량은 끝도 없이 추락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한국 문헌정보학 대학원이 학문 후속세대의 양성이라는 본연의 목적에서 벗어난 지는 이미 오래되었다.

〈표 7〉 한국연구재단 「학술연구분야분류표」의 소분류와 세분류 수정안

소분류	세분류		소분류	세분류			
문헌정보학일반	정보/도서관정책 비교문헌정보학 도서관사	⇒	문헌정보학일반	도서관사 문헌정보연구 문헌정보교육 문헌정보윤리/철학			
기록관리/보존			정보자원	정보자원 생산 정보자원 개발 정보자원 관리/보존			
서지학			정보조직	정보조직	분류/편목 색인/초록 메타데이터 시소러스		
도서관/정보센터경영				정보서비스	정보서비스	정보조사제공 독서지도/독자상담 이용자교육	
정보서비스					정보검색	정보검색	데이터베이스 검색이론 탐색기법
정보자료/미디어						정보이용자	이용자연구일반 정보형태
정보조직	분류 편목/메타데이터 색인/초록 전문용어/시소러스		문헌정보기관경영	문헌정보기관경영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정보센터 도서관네트워크 기록관/문서관		
정보검색	자동색인/요약 자동분류/클러스터링 검색모형/기법 데이터베이스			문헌정보정책	도서관정책 정보정책		
디지털도서관				문헌정보기술	도서관전산화 디지털도서관 자동정보처리		
정보공학				기타문헌정보학	기타문헌정보학	한국서지/고문헌관리 기록관리 정보공학 계량정보	
계량정보학							
정보교육							
기타문헌정보학							

필자는 먼저, 주제적인 연관성조차 미약한 상태로 방만하게 나열되어 있는 소분류의 13개 항목을 10개로 축소하였다. 그리고 일부 소분류 항목에만 포함되어 있던 세분류의 연구주제를 10개 항목 모두에 제시함으로써 문헌정보학 연구주제의 가치와 의미를 구체적으로 드러내었다. 필자가 제시한 10개의 소분류 항목은 앞서 ‘문헌정보학 학술논문의 주제영역별 생산 현황(<표 5>)’에 포함된 8개의 핵심 연구영역을 기본으로 삼되, 다른 학문분야와 유사하게 ‘문헌정보학일반’ 항목과 ‘기타문헌정보학’ 항목을 추가해 놓은 것이다. ‘문헌정보학일반’ 항목에는 학문의 역사와 철학/윤리 그리고 연구와 교육의 동향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켰으며, ‘기타문헌정보학’ 항목에는 연구주제의 보편성보다는 특수성이 두드러지는 기록관리/보존, 한국서지학, 정보공학, 계량정보학을 명칭을 표에서처럼 수정하여 포함시킴으로써 단일 학문으로서 문헌정보학의 융합적인 성격을 부각시키고자 하였다.²³⁾

23) 가령, ‘한국 고문헌에 관한 서지적 연구’를 문헌정보학의 세부 영역으로 삼고자 한다면, ‘한국서지’ 혹은 ‘고문헌관리’로 칭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정보처리와 관리를 위한 기술에 대한 연구’를 문헌정보학의 세부 영역으로 들이

한편, 연구의 주제영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연구의 유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외형적 틀을 보장하는 작업이라면, 속내의 보장을 위해서는 연구역량의 근본적인 강화가 필요하다. 연구역량의 강화를 위해 한국 문헌정보학계가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은 제한적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전임 교수진의 실질적인 감축이 진행되고 있으며 대학원의 질적 저하가 구조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학계가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매우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필자가 주창했던 연구역량 강화 방안들 중에서 2018년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되는 방안을 중심으로 다시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는 전임 교수진의 연구역량을 배가하기 위한 방안이다. 전임 교수가 집중해야 하는 주제영역을 집약시켜 내용적 전문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논지이다. 앞서 문헌정보학 연구의 핵심 주제영역으로 10개를 제안했지만, 내용의 보편성을 고려할 때 필수적인 주제영역은 정보자원, 정보조직, 정보서비스, 그리고 문헌정보기관의 경영으로 압축할 수 있다. 그 외에 정보이용자, 정보기술, 그리고 문헌정보정책은 위의 4개 주제영역과 필연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즉, 4개 영역 연구의 논리적 근거가 되거나 응용 도구가 되거나 결과를 적용하면 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정보검색 영역 또한 필수 주제영역에서 제외해도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 검색엔진이나 검색모형의 개발은 한국 문헌정보학계의 배타적 연구영역에서 벗어나 있으며 탐색기법에 대한 연구는 정보서비스 영역에서도 능히 다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과마다 평균 4~5명에 불과한 전임 교수진은 앞서 언급한 4개 핵심 주제영역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연구역량의 배가를 위해 바람직하다.

둘째는 현장 인력의 연구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이다.²⁴⁾ 도서관 사서에 의한 연구가 전체 LIS 연구의 70~80%를 차지하는 미국의 상황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문헌정보학의 학문적 특성 상, 현장 인력의 연구 활동을 촉진시키지 않고서는 연구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묘안은 없다. 현장 인력의 연구 활동을 촉진시키려면 자발적인 인식 변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한국 문헌정보 현장의 조직문화를 고려할 때 인사 상의 혹은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가장 실효적이다. 물론 이러한 제도 또한 현장 인력이 주도적으로 움직일 때 실현 가능하다. 이에 비해 학계가 주도하여 실천할 수 있는 방안 중에는 현장 인력이 생산한 연구 성과를 스스럼없이 발표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다양하게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현장 인력을 위한 학술모임을 상시적으로 개최하거나 현장 논문 중심의 저널을 간행함으로써 학계와 현장의 학술적 소통을 구조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듯

고자 한다면 ‘디지털 정보시스템’ 혹은 ‘자동정보처리’ 정도면 충분하며, 사료적 가치가 있는 자료의 관리와 보존에 대한 연구’를 문헌정보학의 세부 영역으로 들고자 한다면 ‘기록관리’ 혹은 ‘기록보존’이면 족한 것이다.

24) 지난 20년 동안 현장사서의 연구활동은 그 이전에 비해 뚜렷하게 증가하였다. 2000년대 이후 현장 사서의 대학원 진학이 증가하면서 나타난 의미 있는 결과이다. 사서가 생산하는 학위논문이 증가하고 그러한 학위논문이 학술지에 발표되면서 학술논문의 양적 성장이 지속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학위논문 이후에도 연구 활동을 이어가는 사서는 아직 제한적이며, 특히 2000년대 말부터는 대학원에 진학하는 사서의 규모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면서 현장 인력의 연구 활동은 정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김령은, 이제환 2017).

현장의 문제를 학계와의 협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채널이나 매체가 다양해질 때 현장의 연구 활동은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 방안은 학계의 대내외적 연구역량을 하나로 집중하는 것이다. 불과 170명 내외의 전임 교수들로 구성되어 있는 문헌정보학계에 무려 6개의 학회가 난립하면서 6개의 학술지를 계간으로 발간하고 매년 두 차례씩 학술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상황이 고착되어 있다. 외형적으로 보이는 활동량이 어마 무시하여 국외자의 시각에서는 경이롭기까지 하다. 그러나 그 속내의 부실함을 익히 알고 있는 대부분의 교수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통합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왔다. 단지 공식적인 문제 제기를 통해서 통합을 실천하려는 움직임이 없었을 뿐이다. 이제 동일 교수가 여러 학회의 임원직에 이름을 올려야 하는 어색한 모습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제 학회지의 난립으로 함량 미달의 연구물이 학계에 돌아다니게 만드는 부끄러운 행위는 자제하여야 한다. 이제 발표자와 토론자를 제외하면 순수 참가자를 찾아보기 어려운 안쓰러운 학술모임은 그만두어야 한다. 이제 학계는 하나로 통합하여 상시적인 소통을 활성화하고 묶은 과제들을 함께 풀어가는 지혜로운 집단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문헌정보학 연구의 전문성도 유용성도 모두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3. 교육의 실효성 강화

문헌정보학계 사람들은 누구나 알고 있듯이, 한국의 문헌정보학과들이 구조조정의 대상으로 자주 언급되는 까닭은 ‘투자과 이익’ 그리고 ‘공급과 수요’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고자 하는 자본주의사회의 시장논리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의 문헌정보학과는 대부분이 교육논리보다는 시장논리를 경영의 원칙으로 삼아온 사립대학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립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문헌정보학과 교수들이 그들이 운영하고 있는 사서교육원이나 평생교육원 혹은 야간의 교육과정을 스스로 접지 못하는 까닭도 결국은 대학 경영진의 시장논리를 거스를 수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교육과정의 혁신을 위한 요구가 줄기차게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해결이 요원한 까닭은 문제를 야기한 사람도 개선을 요구하는 사람도 모두 문헌정보학계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필자가 일찍이 강조하였듯이, 사서 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질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하는데 앞장 서야 하는 전문직 단체가 너무도 부실하기 때문이다.²⁵⁾

교육과정의 문제는 이렇듯 한국 문헌정보학 교육의 건강성을 뿌리부터 흔드는 암적 질환이 되어 있다. 한국 문헌정보학계는 비합리적인 교육과정을 자체적으로 혁신할 만한 역량을 결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 경영진의 압박을 견뎌낼 만한 체력을 갖추지 못한

25) 문헌정보학과와 문헌정보 현장이 뿔뿔 뿔쳐서 인력 문제의 제도적 장치(즉, 사서자격제도와 사서임용제도)를 혁신한다면 다소 숨통이 트일 수 있지만, 교육과정의 근본적인 혁신이 동반되지 않는 한 그 효과 또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학과들은 결국 구조조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구조조정에 근접해 있는 학과들이 생존을 위해 취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졸업생의 취업률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뿐이다. 그렇지만 인력 시장이 제한되어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그러한 노력은 결국 학과들 사이의 생존을 둘러싸고 벌이는 제로섬 게임으로 결과하고 말 것이다. 학계 전체로 볼 때 그러한 노력의 효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실정이 그러하기에 지난 20년 동안 필자는 사서 인력 시장의 확충과 질적 개선을 위한 도서관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왔다. 제자들의 취업시장을 근본적으로 건강하게 만들지 않고서는 교육의 건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뺏속 깊이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별 학과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문헌정보학계 차원에서 ‘비합리적인 현재의 교육과정’을 개혁하고자 한다면, 필자는 동료교수들이 눈살을 찌푸릴 만큼 혁신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전문 사서의 양성을 위한 (가칭)국립도서관대학을 설립하는 것이다. 사서교육원이나 평생교육원을 통해 사서자격증 수여자의 절반 이상이 배출되는 현재의 상황을 학계가 나서서 주도적으로 혁신할 수 없다면, 차라리 국립경찰대학, 국립예술학교, 육·해·공군사관학교처럼 국가가 관리하는 교육과정을 독립적으로 설치하여 도서관 전문 인력을 제대로 양성하는 발상이다. 사서의 양성을 위한 한국의 교육과정이 ‘조선도서관학교’에서 출발하였음을 돌아볼 때, 나아가 미국식 LIS 교육제도의 설익은 이식이 초래하고 있는 각종 부작용을 고려할 때, 최소 수십 명 단위의 문헌정보학자로 교수진을 구성하여 운영되는 국립도서관대학이 설립된다면 사서 교육의 내실화만큼은 확실히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²⁶⁾

한편, ‘교육의 내용적 실효성’을 제고하려면 앞서 논의하였던 ‘부실의 실체와 요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표준교과과정의 개발과 실행은 여전히 절실하며, 전공 교과목을 전담할 교수진의 보강도 여전히 시급하다. 그리고 전공 교재의 양적 확충과 질적 개선 또한 더 이상 미루어 둘 수 없는 과제이다. 그러나 이 세 과제 모두 결실을 보려면 교수 개인이나 학과 차원의 노력보다는 학계 차원의 체계적인 논의와 합의를 절실히 필요로 한다. 가령, 표준교과목의 구성과 사서자격증을 위한 필수 교과목의 개정 문제에서부터, 현장의 전문 인력을 교수진으로 초빙하기 위한 행·재정적 지원책을 마련하는 문제, 그리고 전공 교재의 개발을 위한 ‘교재개발기구’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학계 차원의 논의가 본격화될 때 비로소 실질적인 해결책이 강구될 수 있는 것이다. 그에 더해 모든 논의과정에서 교수 중심의 논리가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되는 것이고, 도서관선진국의 모범 사례가 아니라 한국 대학교육의 특수성을 잊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이처럼 한국 문헌정보 현장의 목소리와 한국 대학교육이 처한 특수성을 고려할 때, 위에서

26) 이러한 필자의 제안이 “도끼로 자기 발을 찍는” 무모한 발상일 수 있으며, 대부분의 문헌정보학과에게는 거대한 위협으로 다가갈 수도 있다. 그러나 문헌정보학 교육 현장이 도서관학과에서 문헌정보학과로 스스로 개명하고 실천 현장의 확대 또한 스스로 천명했던 만큼 문헌정보학과로서 생존할 수 있는 다양한 길을 더욱 열심히 모색하는 것이 스스로에게도 땀땀하지 않겠는가?

언급한 세 과제 중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표준교과과정의 개발과 실행이다. 재론할 필요도 없지만, 교육내용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굳건히 하려면 교과과정의 표준화가 무엇보다 절실하기 때문이다. 특히, 사서와 사서교사의 임용시험에서 요구하는 필수 교과목조차 이수하지 않고도 졸업에 필요한 최소전공학점만 이수하면 자동적으로 사서자격증이 부여되는 현행 인력양성시스템의 폐해를 더 이상 방치하는 것은 대학에 설치된 ‘정규 교육과정’이 갖는 가치와 의미를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에 다름없다. 게다가 교과과정의 표준화가 가져올 부수적인 효과 또한 만만치 않다. 필수 교과목의 선정과 의무적 이행을 위한 학계의 합의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면, 필수 교과목을 전담하는 교수들이 학계의 중심축을 구성하게 됨으로써 학문의 핵심 영역에 대한 연구가 보다 체계화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관련 교재의 생산 또한 보다 전문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 있기에 필자는 과거 몇 번에 걸쳐 수면 위로 올라왔다가 이내 가라앉고 말았던 ‘표준교과과정에 대한 논의’가 학계 차원에서 조속히 재개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논의의 단초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필자의 개인적 경험과 선행연구의 여러 제안을 참조하여 ‘표준교과과정의 모형’을 실험적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참고로, 필자가 제안하는 표준교과과정(안)은 네 가지 원칙을 기저에 깔고 있다. 첫째, 문헌정보 전문 인력이 갖추어야 하는 필수 역량(즉, knowledge, skills, attitude)을 균형 있게 갖출 수 있도록 교과목을 편성하였다. 둘째, 전공 지식의 요체를 ‘정보자원에 대한 지식’, ‘정보이용자에 대한 지식’, 그리고 ‘양자의 연계에 필요한 지식’으로 설정하고 그러한 전공 지식을 고르게 숙지할 수 있도록 교과목을 편성하였다. 셋째, 최소전공학점제가 적용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전공 역량을 가능한 최대로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필수 교과목을 지정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공 역량의 체계적인 축적이 용이하도록 교과목의 목적과 수준에 따른 ‘표준이수과정’을 제시하였다.

〈표 8〉 4년제 문헌정보학과 표준교과과정 모형

	1학기		2학기		누계
	필수 교과목	선택 교과목	필수 교과목	선택 교과목	
1학년	문헌정보학개론		도서관문화사		2과목
2학년	정보자원론 정보분류론	문헌정보기술론 문헌정보윤리론	정보행태론 정보조직론	한국정보자원 해외정보자원	8과목
3학년	장서관리론 정보검색론	정보조직실습 주제전문자료 도서관정보망	정보서비스론 도서관자동화론	한국서지론 기록관리론 독서지도론	10과목
4학년	도서관경영론	연구방법론 이용자교육론 디지털도서관	현장실습	문헌정보정책론 고문헌관리론 학교도서관론	8과목
누계	6과목	8과목	6과목	8과목	28과목

〈표 8〉은 그러한 원칙에 기초하여 필자가 제안하는 ‘학부 표준교과과정의 모형’을 담고 있다. 표에 포함되어 있는 전공 교과목은 모두 3학점 단위로 구성되며, 신입생을 위한 2개의

전공기초 과목을 시작으로 2~4학년의 학생을 위한 10개의 전공필수 과목과 16개의 전공선택 과목으로 나뉘어있다. 모두 28개의 과목으로 구성된 교과과정(안)에서 10개의 전공필수 과목은 문헌정보학 연구의 핵심 영역을 구성하는 8개 주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과목을 위주로 하여 편성하였다. 여기에 도서관자동화시스템(LAS)에 대한 지식과 도서관 현장에서의 실습 경험은 사서자격증 수여 대상자라면 마땅히 갖추어야하는 전문 역량이라는 판단에서 전공필수 과목에 추가하였다. 16개의 전공선택 과목은 전공필수 과목에서 숙지한 전공 지식을 심화시키기 위한 목적 그리고 졸업 후 진로와 연관된 특화된 전공 지식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을 함께 고려하여 편성하였다. 가령, 사서교사나 고문헌사서 혹은 시스템사서나 기록연구사 등으로 진로를 모색하는 학생의 경우에 고학년 단계에서 선택적인 이수가 가능하게 하였다.

거듭 강조하지만, <표 8>의 모형은 실험적인 것으로 교과과정의 표준화를 위한 학계의 논의를 촉발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제안하였다. 교과과정의 표준화를 통한 교육의 내실화가 문헌정보학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절실하다는 필자의 문제의식에 공감한다면, 문헌정보학계의 여러 학회들은 시급히 모여서 공론의 장부터 만들어야 할 것이다. 공론의 장을 통하여 학과들의 현실적인 고충과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고, 그러한 논의를 거쳐 한국 문헌정보학 교육이 지향해야할 공통의 목표가 도출될 수 있다면, 표준교과과정의 개발과 실행은 결코 어려운 숙제가 아닐 것이다. 소아적 이기심에서 비롯되는 소탐대실의 어리석음만 돌출되지 않는다면 공생과 번영의 길을 찾는 것이 어찌 불가능하겠는가? 게다가 공론의 장이 학계에 가져다 줄 결실은 교과과정의 표준화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특정 교과목을 전담하는 교수들이 만나서 모임을 상설화하여, 그 모임을 통해 교과목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고, 그러한 논의가 공동 교재의 체계적인 개발까지 이어진다면, 반세기 넘도록 이어지고 있는 ‘교육내용의 부실성’을 둘러싼 논란은 영원히 종식될 수 있을 것이다.

IV. 글을 마치며

대학교수로서의 이력이 쌓이다보니 도서관 현장에 진출해 있는 제자들이 제법 많아졌다. 그들과의 만남은 언제나 즐겁지만, 그들이 들려주는 치열한 현장 이야기는 때로는 고마움으로 때로는 갑갑함으로 필자에게 다가왔다. 그러한 고마움과 갑갑함이 차츰 쌓이면서 책상물림에 불과했던 필자의 학문이 조금씩 깊이를 더해왔다. 강단에 설 때나 연구를 할 때나 그들의 이야기는 필자에게 항상 좋은 지침이 되었다. 필자로 하여금 자신을 늘 돌아보게 만드니 진정한 선생은 그들이지 싶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사서로서의 경험이 두툼해지던 언제부턴가 그들의 이야기에서 도서관은 조금씩 사라져 갔다. 도서관 이야기를 할 때면 눈동자에서 불꽃이 일던 그들이었는데 업무 이야기보다는 세상 이야기를 화제로 삼는 시간이 점차 늘어났다. 그들의 직업이 사서인 것은 변함이 없는데 그들의 관심사에서 도서관이 멀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이 어렵사리 입을 열었다. 그들의 일터를 선진국의 도서관처럼 만들어 보려고 애를 썼지만 중과부족을 실감하고 熱心(열심)을 거두는 중이라고 했다. 열심이 남아 있으면 왕따 당하고 시름만 깊어지니 이제 그만 미련을 버리고 남들처럼 ‘직장인’으로 살아야겠다고 했다. 송구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변을 이어갔다. 교과서에 나오는 선진국의 도서관을 따라가기에는 우리 도서관의 기본 여건부터 다르고 내외의 장애가 너무도 많다고 했다. 몇몇 사서들의 열심만으로 넘어설 수 있는 여건의 차이와 구습의 장벽이 아니라고 했다. 그러더니 작정한 듯 문헌정보학계를 향한 원망과 비난을 쏟아냈다. 도서관 수가 늘어난다고 도서관서비스가 저절로 선진국 수준이 되는 것은 아닌데 문헌정보학과 교수란 사람들은 도대체 현장에 관심이 없다며 투덜거렸다. 별로 쓰임새도 없는 논문이나 쓰면서 기본 역량조차 부실한 사서자격증 소지자를 양산하는 구태를 지속할 바에는 차라리 학과도 교수도 없애는 편이 낫겠다고 격한 소리까지 토해냈다.

모임에서 돌아와 곰곰이 생각해 보니, 필자도 그들처럼 분노로 가슴이 들끓던 시절이 떠올랐다. 심지어 분노를 삭이지 못하고 학계를 향해 거친 말을 쏟아냈던 기억도 되살아났다. 그래서 당시에 썼던 글을 찾아보니 다음과 같은 거친 문구가 글 속에 살아있다.

“... 학생들이 제출한 ‘문헌정보학과 나’라는 제목의 리포트에 포함되어 있었던 글귀는 지금도 생생하다. 몇몇 3학년 학생들이 ‘詐欺’라는 표현을 썼다. ‘문헌정보학과’라고 학과 명칭을 바꾼 것은 ‘사기’라는 이야기였다. ‘모집요강’의 내용도 ‘사기’라는 이야기였다. 그리고 결과 속이 다른 ‘교과과정’도 ‘사기’라는 이야기였다. 그래서 그때부터 나는 고급 ‘사기꾼’이 되었다.” (이제환 1998)

참으로 많은 생각이 스쳐갔다. 음주를 빙자한 제자들의 도발(?)이 필자의 가슴을 허하게 만들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문헌정보학계를 향한 필자의 거친 도발이 있는 지 20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나 지금이나 학계의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필자의 가슴을 무겁게 눌러왔다. 그러다가 문득 다시 확인해 보자는 생각이 들었다. 2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한국 문헌정보학의 건강 상태는 과연 어떠한지 들여다보고 싶은 충동이 일었다. 이 글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옛날보다 조금은 넓어지고 따스해진 시각으로 한국 문헌정보학의 건강 상태를 찬찬히 들여다보면서 예전의 질환이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하고자 했고, 만약에 질환이 여전히 있다면 구조적인 원인을 찾아내고 질환을 뿌리 뽑을 수 있는 처방을 모색하고 싶었다. 그래서 20년 전에 했던 방식 그대로 문헌정보학의 정체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부터 다시 추적하였고, 현장의 시각에서 연구의 유용성을 분석하였으며 교육시스템의 실효성을 검증하였다.

분석과 검증의 결과는 본문에서 기술한 그대로이다. 필자의 우려는 기우가 아니었다. 한국 문헌정보학의 구조적 질환은 악화되어 있었으며, 특히 교육의 부실성은 문헌정보학과의 존재를 뿌리 채 흔들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다. 필자는 학문의 건강을 회복하려면 기본 체질부터 바꿔야 한다는 판단을 하였고, 그를 위해 ‘정보자원’을 문헌정보학의 핵심 개념으로 삼을 것과

한국의 정보자원과 정보이용자를 문헌정보학 연구와 교육의 양대 축으로 삼을 것을 제안하였다. 학문의 이론적 토착성과 기능적 실효성을 강화하는 것이 기본 체질을 강건하게 만드는 첩경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필자는 또한 한국 문헌정보학의 성격을 사회과학으로 새롭게 정립할 것을 주창하면서 연구의 유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과 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또한 실사구시의 관점을 유지하면서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필자가 본문에서 제안한 여러 처방이 한국 문헌정보학의 건강성을 회복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학계의 의식과 행태에 근본적인 변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문헌정보학 교수들이 학계와 현장이 당면해 있는 위기의 본질과 심각성을 냉철히 인식하여야 한다. 내 발등의 불이 아니라고 무심하게 방치하다간 학문의 입지는 끝도 없이 좁아질 것이고 현장에서 사서가 설 자리는 급속도로 줄어들 것이다. 그래도 아직은 구조조정의 초입이라 학과도 현장도 더부살이의 기회라도 잡을 수 있지만 머지않아 그러한 기회조차도 사라질 것이다. 따라서 공멸의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문헌정보학 교수들부터 온전히 바뀌어야 한다. 우선 함께 모여서 문헌정보학 고유의 지식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고민을 시작하여야 하며, 현장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실행하여야 한다. 그래서 문헌정보학 고유의 교육 현장과 실천 현장을 견고히 지켜내는데 역량을 집중하여야 한다. 문헌정보학계 사람들은 이미 체감하고 있지 않은가? 도서관계에서 사서의 입지가 위축되고 위상이 약화되면서 문헌정보학의 입지와 위상 또한 왜소해지는 것을 몸으로 느끼고 있지 않은가?

우리 모두 각성하여야 한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주제넘지만 그리고 과욕이 겹치지만, 이 글이 문헌정보학과 교수들 모두가 자신의 입지와 학문의 미래를 찬찬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참고문헌

- 곽동철 외. 2008. 「사서직원 자격요건 개정을 위한 기초연구」. 서울 : 문화체육관광부.
- 김령은, 이제한. 2017. 대학도서관 이용자교육에 관한 국내 연구의 특징과 과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8(3): 83-112.
- 노동조. 2009. 한국의 문헌정보학 교육을 위한 표준교육과정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3(4): 55-82.
- 노영희 외. 2012. 한국문헌정보학 교과과정 운영모형 및 표준교과목 개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6(2): 55-82.
- 박현영. 2010. 도서관 현장에서의 장서개발과 편목업무를 통해 본 문헌정보학 교육의 문제. 『2010 한국도서관·정보학회 동계학술발표대회』, 2010년 12월 3-4일. 대전: 충남대학교, 25-39.
- 염영애. 2003. 문헌정보학의 코어 교과목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4(3): 33-49.
- 조인숙. 1995. 문헌정보학 분야 연구성과의 활용실태 분석. 『정보관리학회지』, 12(2): 193-212.

- 이제환. 1998. 전환기 한국 문헌정보학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도서관학논집』, 28: 313-353.
- 이제환. 2003. 전문직 이론을 통해 본 사서직의 전문성.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7(2): 57-87.
- 이제환 외. 2005. 문헌정보학 교육에 대한 현장 사서의 평가와 요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9(4): 45-69.
- 이제환. 2018. 『한국의 도서관정책: 쟁점과 과제』. 대구: 태일사.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Jo, In-Sook. 1995. "Analysis of Practical Utilization of Research Outputs in Librarianship and Information Managemen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12(2): 193-212.
- Kim, Ryoung-Eun and Jae-Whoan Lee. 2017. "A Literature Review on User Instruction of Korean Academic Librari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8(3): 83-112.
- Lee, Jae-Whoan. 1998. "Toward a New Paradigm of the Korea's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8: 313-353.
- Lee, Jae-Whoan. 2003. "Is Librarianship in Korea a Profess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7(2): 57-87.
- Lee, Jae-Whoan et al. 2005. "Evaluation and Requirement of Librarians on LIS Educat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9(4): 45-69.
- Noh, Dong-Jo. 2009.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 Standard Curriculum for Education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3(4): 451-468.
- Noh, Young-Hee, In-Ja Ahn and Sang-Ki Choi. 2012. "A Study of the Curriculum Operating Model and Standard Courses for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6(2): 55-82.
- Um, Young-Ai. 2003. "A Study on the Core Courses of the Departments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4(3): 33-49.